



트럼프의 세법 개정안이 미국 대학원생들의 세후임금에 미칠 영향

김정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17년 11월 16일, 공화당의 주도로 발의된 세법 개정안이 찬성 227 대 반대 205표로 하원을 통과하였고, 12월 2일에는 상원을 통과했다. 이는 1조 5천억 달러(한화로 약 1,650조 원) 수준의 감세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최근 30년 이내의 최대 감세정책이며, 만약 실행에 옮겨진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초로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¹⁾ 이와 같은 계획에는 세법과 관련한 여러 개정안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미 하원의 세법 개정 계획이 대학원생 수업조교 및 연구조교들의 세금을 400%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큰 논란이 일고 있기에, 이 글에서는 미 하원의 세법 개정안이 그 대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대학원들의 세후임금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 미 하원의 세법 개정안과 대학원생들의 세후임금 변화

이번 미 하원의 세법 개정안은 현재 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규정 중

1) The New York Times(2017.11.16), "\$1.5 Trillion Tax Cut Passed by House in Mostly Party-Line Vote," Retrieved on Nov 18th, 2017, <https://www.nytimes.com/2017/11/16/us/politics/tax-bill-house-vote.html>

117(d)절을 수정하여 장학금(scholarship)으로 얻은 소득을 세금 면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대학원생들의 세후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통상적으로 대학원생 수업조교(teaching assistant) 및 연구조교(project assistant or research assistant)들은 관련 업무를 하게 될 경우 학교에 소속된 노동자로 간주되어 일정 급여(stipend)를 받으면서 등록금(tuition)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급여에 대하여 세금을 내고 있으나, 등록금 면제분은 장학금으로 해석되어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미 하원의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이들은 급여뿐만 아니라 등록금 면제분에 따른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미국교육이사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에 따르면, 약 145,000명의 대학원생들이 수업조교와 연구조교로 일하면서 등록금을 면제받고 있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은 대학에서 받은 연 15,000~30,000달러 정도(한화 약 1,650만~3,300만 원)의 (세전)급여를 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²⁾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공학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라이언 힐(Ryan Hill)은 조교로 일하면서 30,000달러 정도의 생활비를 받고 있으며 50,000달러 정도의 등록금에서 면제된다.

하지만 이번 하원의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는 연 80,000달러(한화 약 8,8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미 국세청에 보고되기 때문에 그의 세금은 지금보다 3~4배 정도로 상승하게 된다. 라이언 힐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돈 때문에 지금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는 않다. 지금도 항상 절약하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였다. 이전에는 공화당 지지자였으나 현재는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다는 그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초과 보험 가입을 취소하고 그와 그의 아내는 최근 태어난 아이의 옷을 꿰매어 입고 있다고 하였다.³⁾

2) CNBC(2017.11.16), “House GOP tax plan would increase taxes for graduate students by roughly 400 percent,” Retrieved on Nov 18th, 2017, <https://www.cnn.com/2017/11/16/house-gop-tax-plan-could-increase-taxes-for-grad-students-by-400-percent.html>

3) National Public Radio(2017.11.14), “Grad Students Would Be Hit By Massive Tax Hike Under House GOP Plan,” Retrieved on Nov 18th, 2017, https://www.npr.org/2017/11/14/563879136/house-gop-tax-plan-would-hit-grad-students-with-massive-tax-hike?utm_source=twitter.com&utm_medium=social&utm_campaign=npr&utm_term=nprnews&utm_content=2043

결과적으로 대학원생 수업조교 및 연구조교들의 세후임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버드대학교의 신문인 하버드 크림슨(Harvard Crimson)도 하원의 세법 개정안에 의해서 평균 35,000달러를 급여로 받는 하버드의 대학원생 수업조교 및 연구조교들이 현재보다 3~4배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급여의 절반 수준을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⁴⁾ 물론 이번 하원의 세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대학원생의 세후임금에 어떠한 수준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는 등록금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립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수업조교는 (수업이 없는 여름방학을 제외한) 9개월간의 노동으로 약 16,000~18,000달러 정도를 받게 되는데,⁵⁾ 위스콘신 주의 거주자(state resident)가 아닌 학생들은 25,000달러 수준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만약 이번 하원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은 41,000~43,000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국세청에 보고되어 많게는 현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인 약 2,500달러보다 7,000달러 더 많은 약 9,50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대학원생 수업조교들은 소득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원의 세법 개정안은 대학원생들이 세후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미 하원의 세법 개정안이 미국 대학원 교육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전미 대학원-전문 대학원생 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Graduate-Professional Students)의 법무 이사인 사만다 헤르난데즈(Samantha Hernandez)는 이와 같은 세금 인상 법안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저는 대학원생과

4) The Harvard Crimson(2016.5.26), “GOP Plan Could Cause Grad Student Tax Hike,” Retrieved on Nov 18th, 2017, <http://www.thecrimson.com/article/2017/11/14/tax-plan-graduate-students/>

5)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inimum Stipend Levels for Graduate Assistants - 2017-18, Retrieved on Nov 18th, 2017, <https://grad.wisc.edu/studentfunding/rates/>

전문 대학원생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법과 연방법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제가 봐왔던 어떠한 법보다 대학원생과 전문 대학원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⁶⁾

이는 미국 대학원 교육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물론 급여 수준이 생존에 꼭 필요한 생활비 수준이라고는 하나, 미국 대학원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 대학원생들 중 10% 미만 정도만이 주로 자비로 대학원 등록금 및 생활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75%가 넘는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진학에 따른 부채를 지지 않고 졸업할 수 있었다.⁷⁾ 하지만 이번 하원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이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미국 대학원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겠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 대학원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큰 이유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 하원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등록금 면제만 받을 뿐 따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이나, 졸업요건을 빨리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계열 대학원생들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의 경우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장학금에 대해 세금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들의 세후임금이 0보다 적게 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학생들이 석사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동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졸업요건을 빨리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계열 대학원생들은 위의 예상되는 변화에 더욱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 대학에서 학위논문을 제외한 모든 졸업요건을 갖춘 대학원생(Ph.D. Candidate or Dissertator)들은 등록금이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장학금도 받지 않게 되어 이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계열 대학원생들의 경우, 필수요건으로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들을 수강

6) Wired(2017.11.8), “Grad Students Are Freaking about the GOP Tax Plan. They Should be,” Retrieved on Nov 18th, 2017, <https://www.wired.com/story/grad-students-are-freaking-out-about-the-gops-tax-plan-they-should-be/>

7) *ibid.*

한 이후 졸업요건으로 요구되는 일련의 시험들을 통과한 뒤 학위논문의 제안서를 제출하여 학위논문을 제외한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는 데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졸업이 상대적으로 빠른 공학계열 박사과정 학생들에 비하여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다. 보통 박사과정 학생들이 미국 대학원에 입학할 때의 장학금 및 급여 보장을 받는 기간이 5년 정도임을 감안하였을 때, 많은 경우 총 보전 기간에 걸쳐 장학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계열 대학원생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욱 많이 납부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대학원 교육에 따른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만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미국교육이사회는 미 하원 조세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에 해당 세법 개정안이 저소득층(학생)노동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바 있다.⁸⁾

이번 세법 개정안의 부정적인 영향은 단순히 대학원 교육의 축소에서만 멈추지 않고, 미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어번 연구원의 어번-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 at the Urban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인 킴 루벤(Kim Rueben)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단지 대학원생들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 교육을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는 학문 및 기술발전에 악영향을 주어 경제에 전반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킴 루벤은 이번 계획으로 대학원생들에게 걷을 수 있는 세금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위와 같은 결정이 경제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⁹⁾ 또한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과정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이때 생긴 부채 때문에 학계에 남는 것

8)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2017.11.6), "Re: Higher Education Provisions in H.R. 1, the Tax Cuts and Jobs Act."

9) National Public Radio(2017.11.14), "Grad Students Would Be Hit By Massive Tax Hike Under House GOP Plan," Retrieved on Nov 18th, 2017, https://www.npr.org/2017/11/14/563879136/house-gop-tax-plan-would-hit-grad-students-with-massive-tax-hike?utm_source=twitter.com&utm_medium=social&utm_campaign=npr&utm_term=nprnews&utm_content=2043

을 선택하기보다는 산업 분야로 바로 진출하는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이 공계열의 경우 학계에서 제공하는 연봉보다 산업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부채가 있는 대학원생들은 학계에 남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산학 협력에서 발생하는 기술발전 등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미국 경제 전체의 기술발전이 보다 느려지게 될 것이다.¹⁰⁾

■ 맺음말

이 글에서는 미 하원의 세법 개정안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원생의 세후임금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12월 2일에 통과된¹¹⁾ 상원의 안에서는 대학원생의 세금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¹²⁾ 하지만 상원과 하원의 세법 개정안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양원이 협의를 거쳐서 단일안을 구상한 이후 이를 양원 모두에서 통과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대학원생 수업조교와 연구조교들이 받는 장학금에 대한 세금면제 제도가 폐지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대학원생 수업조교와 연구조교들이 영향을 받을 세금면제 제도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KLI

10)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2017.11.6), "Re: Higher Education Provisions in H.R. 1, the Tax Cuts and Jobs Act."

11) CNN(2017.12.2), "Senate passes sweeping GOP tax plan in early hours of Saturday morning," <http://www.cnn.com/2017/12/01/politics/senate-tax-bill-vote-uncertainty/index.html>

12) Chemical & Engineering News(2017.11.14), "U.S. Senate bill would preserve tax-free tuition waivers for graduate students," Retrieved on Nov 18th, 2017, <https://cen.acs.org/articles/95/i46/US-Senate-bill-preserve-tax.html>